

지속가능한 국가청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사회통합지수와 국가청렴도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national integrity system
- Focusing on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Cohesion Index and Corruption Perception Index -

이 선 중(Lee, Sun Joo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hesion and national integrity in relation to the enhancement of the integrity level of our society.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and the level of national integrity in OECD countries,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the social cohesion index and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ocial cohesion index and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national integrity in countries with a high level of social cohesion was generally high.

Corruption can act as a factor that hinders the will of the community to integrate into society, and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can also affect the level of integrity in the country. Therefore, anti-corruption strategies that focus only on corruption itself may not be effective.

Considering that corruption is the result of a social system that reflects the legal system, economic culture, and political system of the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build a sustainable national integrity system that can improve the legal system, economic culture, and political system that causes corruption.

Key words: Sustainability, National Integrity System, Social Cohesion Index, Corruption Perception Index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부패학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 보완한 것임

**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행정학박사

I. 서론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에 관한 평가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 Index)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61점으로 역대 최고점수를 받았으며 180개국 중 33위로 도약하였다. 2016년 52위였던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청렴 수준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부패인식지수 측정 결과 국가 청렴 수준 20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문제는 지금까지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한 여타 반부패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에 그 영향력이 매우 큰 사건이다.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 향상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반부패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방향성이 맞는 것인지 반부패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개념과 관련해서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 그 중 “부패는 공동체의 법제도, 경제문화, 정치제도가 반영된 사회체제의 결과물(Svensson, 2005)”, 또는 “사회제도적 요인과 인간의 기회주의적 선택의 제도화”(김은경 외, 2015)”라는 부패의 개념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두 개념 모두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회체제 혹은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국가, 사회, 조직)의 법제도, 경제문화, 정치제도가 반영된 결과물 또는 사회제도적 요인이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 사회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 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되짚어 논의를 풀어가는 이유는 지금까지 반부패정책이 개인의 부패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부패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측면의 법제도, 경제문화, 정치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김은경 외(2015)의 부패 발생에 관한 맥락을 살펴보면 사회제도적 요인이 개인의 ‘기회주의적 선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기회주의적 선택’은 전통적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나 비윤리적 행위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체제의 결과물로서의 개인의 부패행위나 비윤리적 행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적 요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제도적 요인이 기회주의적 선택을 유인하는 형태로 자리 잡는다면 개인의 부패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반부패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반부패정책은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들을 구축하고 집행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의 부패방지정책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LH 사태의 이면에는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의 허점과 공직자의 잘못된 행태 이외에도 다른 요인은 없는 것일까?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 모으다’라는 말의 줄임말로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불가능한 경제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려는 행태를 ‘영끌이’라고 한다. 이러한 영끌이 현상에서 공직자들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공동체 구성원들이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개롱이(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만든 사회제도가 기회주의적 행동(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을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사회공동체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부패청렴정책이 그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데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반부패정책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패행위는 사회제도와 개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기회주의적 선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반부패정책 이외에 사회, 경제, 법 기반의 제도적 정책들이 구성원의 기회주의적 선택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반부패청렴정책이 개인의 잘못된 행태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게 된 제도적·환경적 기반에 관한 변화를 꾀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반부패정책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제도적 요인(사회통합 수준)이 한 국가의 부패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국가청렴시스템 구축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1. 국가청렴시스템의 개념 및 구성

국가청렴시스템(NIS : National Integrity System)은 국제투명성기구가 개발하여 발전시켜온 하나의 개념적 모델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적 접근법이다. 국가청렴시스템은 성공적 부패방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다른 거버넌스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각 행위자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접근방식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공부문, 공공감시기관(감사기구, 법집행 기관),

정당, 언론, 시민사회, 기업 등이 협력을 통하여 각 주체가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TI, 2002). 또한 이러한 부문들은 그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반을 두고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부문들이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를 구축하고 서로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시스템은 어느 한 부문의 청렴 수준이 낮거나 적절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을 때 전체 반부패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

이러한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시스템 구축은 거시적 측면에서의 청렴시스템 구축이라는 추상적인 접근방식이기는 하나 국가 전반의 부패방지전략을 수립할 때 그 방향성 설정에 근거가 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청렴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영역과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 평가영역은 각 행위자들의 역량, 행위자들의 내부거버넌스 시스템, 각 행위자의 청렴시스템에서의 역할의 정도가 기준이다(TI, 2002). 이러한 기준은 한 국가의 청렴시스템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국가청렴시스템의 근간에는 이러한 행위자들의 역량이나 내부거버넌스 시스템, 각 행위자의 역할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체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부패전략은 사실 정치체제, 경제체제, 법체제, 사회체제 전반이 한 국가의 청렴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풍부하게 다루어지고는 있지 않다. 부패행위는 사회체제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제도나 사회제도에 따른 사회문화가 국가의 청렴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거시적 관점에서의 부패발생 영향요인 선행연구

부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정치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 등을 대표적 변수로 하여 이와 관련된 부패와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GDP 대비 정부소비 비중과 일인당 GDP 등 경제적 변인이 정치적 변인과 결합되어 부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장근호, 2000). 또한 민주주의와 법적 안정성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부패의 원인을 설명하기도 한다(김태은 외, 2008).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부패발생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로는 조은경·이정주(2006), 이정주(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조은경·이정주(2006)는 Hofstede의 문화분류를 연고주의 문화와 연계하여 연고주의 문화와 부패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Hofstede가 문화를 권력 거리감, 집단주의, 남성주의, 불확실성 회피로 구분한 문화적 차이와 국가청렴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권력거리지수가 낮고, 개인주의지수가 높고, 불확실성 회피지수가 낮을수록 국가청렴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주(2008)는 사회자본을 교량형 사회자본과 결속형 사회자본을 구분하고 교량형 사회

자본은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결속형 사회자본은 공동체 내부의 집단정체성과 공동목표를 강조하는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였다. 두 사회자본의 수준에 따른 국가청렴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특수화된 사회의 특징을 대변할 수 있는 결속형 사회자본이 높은 국가가 상대적으로 국가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량형 사회자본 수준이 높은 국가가 국가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두터운 사회일수록 국가청렴도 수준도 높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황지태(2017)는 선거에서 국민의 사표의 비중을 나타내는 불비례성 지수와 국가청렴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은(국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정치시스템) 국가의 국가청렴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김병섭 외(2017)는 거시적 사회경제적 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부패의 발생 원인이라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는 연구이지만 국민의 행복을 부의 공공재(public bads)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자치단체 청렴도 측정결과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제도적 조건(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신뢰도), 환경적 변수(복지서비스 만족도, 생활환경시설 만족도, 교육문화체육예술서비스 만족도, 소방안전시설 만족도), 거시경제적 조건(재정자주도, 세출액, 사업체 수)등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환경서비스 만족도, 교육문화 서비스 만족도, 소방안전 서비스, 재정자주도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부패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거시적 요인, 사회체제, 정치체제,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 등과 관련된 대표적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부패에 관한 거시적 변인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부패의 원인 변수
경제적, 정치적 요인	Montinola and Jackman, 2002	민주주의 정도, 공공영역 규모, 일인당 GDP
	Sandholtz and Koetzle, 2000	일인당 GDP, 민주주의 정도, 경제적 자유도, 무역규모
	You and Khagram, 2005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천연자원 수출비율, 연방제 정도
	황지태, 2017	정치체제의 불비례성
	Shleifer and Vishny, 1993	민주주의의 정도
사회문화적 요인	Lipset and Lenz, 2000	성취동기 강조, 제도적 수단의 접근성, 일인당 소득
	조은경·이정주, 2006	권력거리, 집단주의, 남성주의, 불확실성 회피 등의 연구 주의 문화
	이정주, 2008	사회자본(교량형 사회자본, 결속형 사회자본)
	Treisman, 2000	위계적 종교, 개인적 종교
	Dobel, 1978	시민적 덕성, 시민문화

출처 : 신동준(2013)의 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재인용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부패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문화적 또는 사회제도적 관점에서의 부패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

명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신동준(2013)은 사회범죄학적 관점에서 사회체제와 관련하여 사회의 통합정도가 강할수록 부패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기존의 거시적 요인 중 경제지상주의, 가족주의, 종교적 통합, 사회적 신뢰, 시민단체 참여, 일인당 GDP, 정치참여, 불평등 정도의 변인이 부패 인식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통합을 전통적 통합 기제인 종교적 통합과 가족주의로 구성하였는데 종교적 통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가족주의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대적 통합기제인 시민단체 참여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통합수준과 국가청렴시스템

1) 사회통합의 개념 및 사회통합지수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계층간 이동의 불확실성은 사회적 격차를 낳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격차는 다시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악순환을 일으켜 사회 내 구성원간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의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합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통합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가 존재하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대명 외(2009)는 사회통합을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강신욱 등(2012)은 “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잘 결속되어 있는가 하는 상태”로 노대명의 개념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서 상태를 사회적 결속력 정도로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사회적 안전성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조병구 외(2015)는 사회통합이라는 용어 대신에 국민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민통합을 “소통과 공감 등 국민통합 문화의 기반 위에 지속가능하고 상생적인 국가발전을 향해 국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위한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정해식 외, 2016). 이재열 외(2014)는 사회통합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잠재적 갈등 소지와 사회적 통합역량 간의 관계로 개념화하여 사회통합을 설명하였다(정해식 외, 2016).

이러한 사회통합 개념을 측정하는 지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패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요인과 개념적으로 비슷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강신욱 외(2012)의 연구에서 사회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개별 지표들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강신욱 외(2012)는 사회통합지수를 토대로 OECD 국가의 사회통합 수준을 평가하였다. 사회통합지수는 사회적 결속지수, 사회적 안정성 지수, 사회적 형평성 지수로 구성되었다.

각 지수별 사회통합지수의 개별 지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중 사회적 결속지수

에는 개별 지표로 부패인식지수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거시적 부패 연구에서 주된 변인으로 논의되었던 소득 불평등, 빈곤율 등이 개별 지표로 제시되어 있다.

〈표 2〉 강신욱 외(2012)의 사회통합지수의 구성

사회적 결속 지수	사회적 안정 지수	사회적 형평성 지수
선거 참여	1인당 GDP	소득 불평등
선거 외 참여	부양인구 비율	빈곤율
정치적 관심	자살률	고용률
사회참여	1인당 CO2 배출량	실업률
집단간 관계	기대수명	고용보호의 정도
일반 신뢰	주관적 건강상태	공공의료비의 지출 비중
기관 신뢰		공공사회지출 비중
부패 인식		
관용		
생활만족도		

출처: 강신욱 외(2012).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 재인용.

정해식 외(2016)도 사회통합지수를 개발하여 OECD 국가간 비교를 하였다. 여기서 활용된 하위 영역의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포용지수는 “사회구성원이 사회제도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량”, 사회적 자본지수는 “사회구성원의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이해 및 관용의 정도, 참여로 표출되는 시민 역량”, 사회이동지수는 “직업, 소득계층의 이동이 가능한 조건 및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 역량”, 사회갈등관리지수는 “사회적 조건, 인식 수준에서 확인되는 갈등의 수준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제도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정해식 외, 2016).

〈표 3〉 정해식 외(2016)의 사회통합지수 내 지표

하위 영역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개념 정의	사회구성원이 사회제도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량	사회구성원의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이해 및 관용의 정도, 참여로 표출되는 시민 역량	직업, 소득계층의 이동이 가능한 조건 및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 역량	사회적 조건, 인식수준에서 확인되는 갈등의 수준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제도 역량
최종 산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빈곤율 •성별 격차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GDP 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적 자유 •일반신뢰 •관용 •시민참여 •기관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교육지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심분위분배율 •교육성취도 •학업중도탈락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률 •민주주의지수 •저임금 확률 •급여격차 •노동소득분배율

출처: 정해식 외(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6 재인용.

사회통합과 부패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강신욱(2012)의 사회통합지수의 사회결속력지수의 한 개별 지표로 부패인식지수를 제시한 것을 볼 때 부패가 사회결속력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상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패가 사회공동체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하나의 변수로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해식 외(2016)의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에서도 부패인식지수를 고려하였으며 사회갈등과 관리영역의 개별 지표로 부패인식을 측정하는 지표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는 부패를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상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정해식 외(2016)의 사회통합지수에서는 부패 요인은 개별 지표에서 제외되었다.

국외의 사회통합지수 중 베텔스만의 사회통합지표는 사회적 관계, 연결성, 공동선 지향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연결성 영역의 공정성 인식 부분의 세부 지표로 제시된 항목은 부패, 경제영역 부패, 높은 지위와 부패의 연관성 인식 등으로 부패와 연관된 내용으로 측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Dragolov et al., 2013).

2) 지속가능한 국가청렴시스템과 사회통합

국제투명성기구가 제시하는 국가청렴시스템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속가능성인지의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가능성이 사회통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지속가능성과 국가청렴시스템의 관계는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중 평화, 정의, 강한 제도 구축은 부패방지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강한 제도란 국가청렴시스템과 동일한 제도적 기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민정선, 2020).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세 가지 개념이 제시되는데, 첫째 세대간 형평성이다. 세대간 형평성이란 장래 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환경의 과도한 개발이 제한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생태적 수용력 내에서의 개발로 환경오염물질이 자연의 정화능력 안에서 배출되고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의 개발로 개발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국가청렴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첫째, 국가청렴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식은 사회체계 내에서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문제와 결부된다. 최근 사회지도층의 부동산 투기 문제나 입시와 관련된 스펙 만들기는 사회구성원의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며 결국 공동체 구성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부패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는 권리를 빼앗아가고 그러한 권리에 대한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 중

국에는 국가청렴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국가청렴시스템은 생태적 수용력과 비슷하게 사회체계 내에서의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력을 강화하는 부패방지 기제로 볼 수 있다. 부패행위는 한 사회의 공동체 체계를 무너트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패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의 의미는 투명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행태가 그러한지 의문이다. 이종수(2011)는 한국의 반부패시스템 진화과정을 고찰하면서 ‘사소한 부패’는 개선되었으나 권력형·정치형 부패사건은 조금도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길곤(2017)도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팽배한 인식은 정치인의 부패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경선(2020)은 부패인식지수를 구성하는 원천지수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청렴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이 개선된 평가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거대부패(Grand Corruption)와 민간부패와 관련된 평가는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거대부패와 민간부패에 대한 제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부패행위는 시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의지를 꺾고 개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은 사회통합 수준에 따라 국가청렴시스템의 질적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Dobel(1978)은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패는 시민들의 이기심을 키우게 되고 결국은 시민도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긍정적 방향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비윤리적 행위의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듯이 부패행위는 사회적 약자 또는 평범한 시민의 윤리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국가청렴시스템도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될 필요성이 있다.

Ⅲ. 사회통합수준과 부패와의 관계

1. 사회통합지수와 부패인식지수간 상관관계

강신욱 외(2012)와 정해식 외(2016)의 두 연구는 모두 사회통합지수를 개발하고 OECD 국가의 사회통합수준을 평가하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사회통합의 개념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하위지표의 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통합수준과 부패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상관분석도 두 연구의 지수를 개별적으로 활용하여 부패인식지수와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강신욱 외(2012)가 제시한 사회통합지수와 부패인식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통합지수 중 가장 최근 평가결과인 2010년 사회통합지수와 2010년 부패인식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시 부패인식지수가 개별 지표로 포함된 사회적 결속력 지수를 제외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신뢰수준 .01 에서 .534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 정도가 부패수준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uro(1997)는 국가의 청렴수준이 높을수록 투자와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부패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거시적 연구들은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는데 사회통합지수의 소득불평등, 빈곤율, 고용율 등은 이러한 소득증가와 경제성장에 의한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질적 측면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나 부의 성장이 국가의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 아니라 그 결과를 국가의 경제체제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사회적 형평성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사회적 형평성지수와 부패인식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사회적 형평성 지수	부패인식지수
사회적 형평성 지수	1	.534**
부패인식지수	.534**	1

** p<.01수준에서 유의

정해식 외(2016)의 사회통합지수도 부패인식지수간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본 사회통합지수의 개별지수는 부패인식지수와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자본지수, 사회이동지수, 사회갈등관리지수가 0.7대 수준에서의 상관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사회적 포용지수는 0.367의 상관성을 보고하고 있다.

Dobel(1978)은 부패를 “실질적인 공공복리를 위한 활동, 상징, 제도 등에 대한 공정한 이성적 참여에 대한 도덕적 무능력”으로 보는데, 이는 사회통합지수가 측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활동과 상징, 공정한 참여 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임금 확률, 급여 격차 등의 사회갈등 관련 지표는 Dobel이 말하는 도덕적 무능력이라고 부패를 규정하는 관점에서 이와 관련된 도덕적 무능력과 연관되는 지표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사회통합지수는 기존에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인 경제성장, 소득성장 등의 문제보다는 경제성장, 개인소득 증가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지속가능한 발전관점에서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국가청렴도와

관계에서는 한 국가의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양적 관점에서의 거시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 측면인 질적 관점에서의 사회통합 요인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 국가청렴도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5〉 사회통합지수와 부패인식지수간 상관관계 분석

	사회적포용지수	사회적자본지수	사회이동지수	사회갈등관리지수	부패인식지수 (국가청렴도)
사회적 포용지수	1	.439*	.603**	.464**	.367*
사회적자본지수	.439*	1	.751**	.676**	.776**
사회이동지수	.603**	.751**	1	.772**	.757**
사회갈등관리지수	.464**	.676**	.772**	1	.707**
부패인식지수 (국가청렴도)	.367*	.776**	.757**	.707**	1

* p<.05, ** p<.01수준에서 유의

2. 국가별 사회통합수준과 부패인식지수

1) 사회통합지수와 부패인식지수의 관계 : 강신욱 외(2012)의 사회통합지수

강신욱 외(2012)의 사회통합지수 중 사회안정성 지수와 사회적 형평성지수와 부패인식지수를 동일 연도 자료 획득이 가능한 2010년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을 기준을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OECD 국가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사회통합지수 결과를 결합하여 살펴보면 2010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부패인식지수가 높았던 25개 국가의 사회통합지수가 대부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높지만 사회안정성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3개국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형평성 지수가 낮은 국가는 4개 국가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수준이 높은 국가의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회통합수준이 국가의 청렴수준과 연관성이 높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부패행위 예방과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투명성 제고나 책임성 강화 등이 필요하지만 사회체제 전반의 제도 등을 강건하게 구축하는 것도 국가청렴도 제고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표 6〉 OECD 주요국가별 사회통합지수와 부패인식지수 관계 1

국가	사회통합지수(강신욱 외, 2012)		부패인식지수(2010)
	사회 안정성 지수(2010)	사회적 형평성 지수(2010)	
덴마크	5.4	8.3	9.3
뉴질랜드	4.5	6.6	9.3

핀란드	5.1	7.2	9.2
스웨덴	6.3	7.7	9.2
캐나다	5.0	5.9	8.9
네덜란드	6.2	7.1	8.8
호주	5.8	5.6	8.7
스위스	5.8	7.1	8.7
노르웨이	6.6	8.3	8.6
아이스란드	6.4	6.8	8.5
룩셈부르크	6.4	7.4	8.5
아일랜드	6.4	5.1	8
오스트리아	5.9	8.2	7.9
독일	5.5	7.7	7.9
일본	4.0	6	7.8
영국	6.2	6.1	7.6
칠레	5.3	3.3	7.2
벨기에	3.9	7.3	7.1
미국	5.5	4.6	7.1
프랑스	5.4	8	6.8
에스토니아	3.6	4.1	6.5
슬로베니아	5.2	7.2	6.4
이스라엘	5.5	4	6.1
스페인	6.6	5.2	6.1
포르투갈	5.2	6.3	6
한국	4.2	4.7	5.4
지수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 수	3	3	

주 : OECD 가입국 중 2010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국가를 기준(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그리스, 멕시코를 제외)으로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함

2) 사회통합지수와 부패인식지수의 관계 : 정해식 외(2012)의 사회통합지수

정해식 외(2016)의 사회통합지수와 부패인식지수간 OECD 국가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개별지수의 총합산인 종합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개별지수도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청렴도가 높은 국가 중 사회적 포용지수가 낮은 국가는 없었으며 사회자본지수의 경우 4개국, 사회이동지수 4개국, 사회갈등관리 2개국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청렴도가 높은 국가들의 사회통합지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OECD 주요 국가별 사회통합지수와 부패인식지수 관계 2

국가	사회통합지수(정해식 외, 2016)					부패인식지수(2015)
	종합지수	사회적포용	사회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관리	
덴마크	93.5	73.2	81.4	85.9	78.7	91
핀란드	85.4	66.7	86.1	72.2	81.9	90
스웨덴	80.3	56.2	90.5	76.2	79.2	89
뉴질랜드	54.4	53.9	59.6	54.2	54.7	88
노르웨이	85.8	78.6	90.7	66.2	65.6	87
네덜란드	64.8	55.1	63	59.3	74.5	87
스위스	66	54.4	81.7	54.6	73.9	86
캐나다	39.8	38	69.9	42.5	51	83
룩셈부르크	66.3	77.5	74.5	37.3	57.2	81
독일	60.1	58.2	63.1	50.3	66	81
영국	49.6	47.7	57.2	41.1	70.5	81
아일랜드	64.8	59.7	86.6	53.1	59.1	79
호주	41.6	41.7	63.4	43.5	51.8	79
벨기에	78.4	70.7	65.6	61.6	80.1	77
오스트리아	63.4	64.2	60.9	51.8	63.8	76
미국	24.9	33.5	58.6	23.4	47.1	76
아일랜드	42.6	46.3	64.1	46.1	42	75
일본	41.1	36.3	68.3	48.1	51.5	75
프랑스	70.1	76.9	56.2	52.2	61.5	70
에스토니아	32.3	48.7	43.6	34.5	34.6	70
포르투갈	32.6	39	56.3	32.8	48.5	63
폴란드	33.7	56.4	38.5	37.3	23.3	62
이스라엘	16.6	34.8	3.2	27	49.1	61
스페인	37.4	45	56.2	34.2	49.5	58
체코	45.9	63.6	49.4	37.7	38.5	56
한국	20.7	26.6	52.1	34.4	37.7	56
지수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 수	1	0	4	4	2	

주 : OECD 가입국 중 2015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국가를 기준(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스, 이탈리아 제외)으로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함

사회통합지수의 하위 구성지표가 다른 두 모델의 OECD 국가의 사회통합 수준가 국가청

렴도 수준을 비교한 결과 사회통합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국가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통합을 위한 경제체제, 사회체제, 법제도 등의 제도 기반이 국가청렴도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시적 관점에서의 부패예방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 법제도 등이 공동체의 사회통합성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면 국가청렴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한 국가의 국가청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고 미래세대가 건강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국가청렴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위자들의 부패예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패가 사회제도와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제도, 경제체제, 사회문화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사회통합 수준과 부패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회통합 수준은 사회통합지수를 변수로 활용하고 부패 수준은 부패인식지수를 활용하여 그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국가는 전반적으로 국가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통합 수준이 부패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탐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통합의 정도가 공동체의 부패 수준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부패 예방에 초점을 둔 미시적 측면에서의 부패방지전략과 함께 사회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패행위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경제체제, 사회문화 등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국가청렴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산지수인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하여 부패인식지수간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가 합산지수 내의 개별 지표 중 부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토대로 인과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적 내용은 기존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야기했던 경제성장, 1인당 소득 등의 지표는 부패와의 연관성이 있음을 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이다. 즉 국가청렴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경제성장을 논하기보다는 접근방법을 달리하여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부의 배분 문제, 계층격차의 문제, 사회갈등 문제로 바라보는 접근을 통한 국가청렴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즉 양적 접근방식을 넘어 질적 접근방식을 통

해 사회체제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국가청렴시스템 구축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청렴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질적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지표에 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고길곤(2017)은 동일한 정책도 생각의 틀에 따라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면서 부패가 만연하다라는 인식하에서의 부패방지정책은 우리나라 부패수준이 제도적으로 통제가 되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렴성을 증진할 수 있는 시각에서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통합지수와 부패인식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OECD 국가 이외의 분석 대상국을 확대하여 사회통합수준이 국가청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관계로 그 분석대상 수가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표본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통합지수상 제시된 OECD 국가들의 지수가 2010년과 2015년이 최근 자료로 현재의 국가청렴도 수준과 사회통합수준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도 있다.

또한 삶의 질과 관련하여 OECD가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OECD Better Life Index의 개별 지표중에 사회통합과 연관성이 높은 지표를 활용하여 부패인식지수와와의 관계를 분석한다면 사회체제나 사회문화 등이 부패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풍부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OECD Better Life Index는 주거(Housing), 소득(Income), 직업(Job), 공동체(Community), 교육(Education), 환경(Environment),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건강(Health),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안전(Safety),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의 11개 영역별로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111111111111> : 검색일 2021년 9월 15일).

부패의 원인이나 개념 규정이 단지 몇 개의 변수만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고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사회통합지수와 국가청렴도 수준의 관계를 통해 부패의 원인을 사회통합 수준의 정도만을 갖고 해석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Herschel(1982)이 부패현상을 파악할 때 빙산모형(iceberg model)을 제시한 것처럼 지금까지 부패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거시적 지표가 수면 위의 보이는 빙산이었다면 사회통합 변수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수면 밑의 부패현상의 원인일 수 있으며 부패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변수일 수도 있다. 부패의 원인을 단일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통합 관련 변수와 국가청렴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가 부패현상에 대한 원인을 탐색할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하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해석 필요성을 제안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되길 고대한다.

참고문헌

- 강신욱·이현주·김석호·박수진·박은경 (2012).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길곤 (2017). 청렴한 정부와 국정운영.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 2233-2260.
- 김병섭·안선민·이수영 (2015). 거시적 사회경제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3(2): 97-121.
- 김은경·신동준·이정주·이선중 (2015).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 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태은·안문석·최용환 (2008). 전자정부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횡단 및 패널자료를 통한 증거. 『한국행정학보』, 42(1): 293-321.
- 노대명·이현주·강신욱·강은정·전지현·이은혜 (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민경선 (2020).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부패학회보』, 25(4): 237-257.
- 신동준 (2013). 부패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 범죄사회학적 관점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 제96호 겨울호.
- 이정주 (2008). 사회적 자본과 부패와의 관계에 대한 OECD 국가간 비교연구: 교량형 자본과 결속형 자본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3(2): 35-52.
- 이종수 (2011). 한국의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의 진화 과정과 성과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29: 221-249.
- 장근호 (2000). 경제성장과 부정부패: 경제·사회적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15(1): 31-56.
- 정해식·정홍원·구혜란·김성근·김성아·우선희 (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은경·이정주 (2006). 부패친화적 연고주의 문화의 국가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0(4): 491-509.
- 황지태 (2017). 불비례성에 따른 민주주의 유형과 부패인식지수와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범죄학회보』, 11(2): 3-28.
- Dobel, J. Patrick (1978). The Corruption of a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 958-73.
- Dragolov, G., Lgnacz, Z., Lorenz, J., Delhey, J., Boehnke, k.,(2013). *Social Cohesion Radar: Measuring Common Ground,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ocial Cohesion*. BertelsmannStiftung.
- Lipset, Seymour M. and Gabriel S. Lenz (2000). "Corruption, Culture, and Markets" pp. 112-124 in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ed. by Lawrence E. Harrison and Samuel P. Huntington. New York: Basic Books.
- Mauro, P. (1997). The Effects of Corruption in Investment and Government Expenditure: A Cross-Country Analysis. In: Elliot, K.A., Ed., *Corruption and the Global Econom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Chapter 4.

- OECD Better Life Index(<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111111111111>)
- Prins, Herschel (1982). *Criminal Behavior*, N.Y.: Tavistock.
- Sandholtz, Wayne and William Koetzle (2000). Accounting for Corruption: Economic Structure, Democracy, and Trad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 31-50.
- Shleifer, Andrei and Vishny, Robert W. (1993). Corrup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8: 599-617.
- Svensson, Jakob (2005). Eight Questions about Corruption. *Journal of Economics Perspectives*, 19(3) : 19-42.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2). NIS Assessment Toolkit.
- Treisman, Daniel (2000). The Cause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6: 399-457.
- You Jong-Sung and Sanjeev Khagram (2005). A Comparative Study of Inequality and Corrup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1): 136-157.

투고일자 : 2021. 09. 09

수정일자 : 2021. 09. 15

게재일자 : 2021. 09. 30

<국문초록>

지속가능한 국가청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사회통합지수와 국가청렴도 관계를 중심으로 -

이 선 중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 제고와 관련하여 사회통합과 국가청렴도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OECD 국가의 사회통합 수준과 국가청렴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통합 지수와 부패인식지수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사회통합지수와 부패인식 지수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국가의 국가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는 공동체의 사회통합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회통합 수준이 국가의 청렴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부패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부패방지전략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패는 공동체의 법제도, 경제문화, 정치제도가 반영된 사회체제의 결과물인 점을 고려할 때, 부패행위를 유발하는 법제도, 경제문화, 정치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청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지속가능성, 국가청렴시스템, 사회통합지수, 부패인식지수